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 토론부문

“사업자 선정방법은 기술력 중심으로 해야”

[토론자 명단]

김정기 중앙대 교수, 변도은 한국경제신문 주필,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이경태 산업연구원 부원장
이성순 성균관대 교수, 조경근 변호사<무순>

엄영석 (외국어대 교수) 사회자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WTO체제의 출범, 그리고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각국을 통해서 정보통신사업에 있어서의 지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통신산업의 정책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참석자 모든 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교수 :

우선 오늘 발표문이 통신산업 경쟁력방안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 본다. 몇가지의 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1) PCS사업의 경우 초기에 사업자를 선정, 기술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이는 98년 이후 외국의 국내시장 점유에서 가장 눈독을 들이는 사업부분인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자수는 초기부터 경쟁축진을 위해 2~4개로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구역은 장·단점이 있겠으나 광역서비스라는 PCS속성상 초기부터 전국망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PCS의 허가신청에 관해선 기술과 능력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지금 가장 관건이 되어 있는 CDMA,

TDMA방식 표준 선택 문제는 선불리 결론내리기 힘들지만 CDMA방식은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온 것이니만큼 더 추진해야 했고 TDMA는 세계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홀해선 안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두가지 표준안이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남는다.

2)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해당사업의 규모와 성격 분석아래 외국과의 경쟁력확보도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한국통신의 경영혁신문제는 한국통신의 국내경쟁보다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측면을 보았을 때 공정경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분간은 한국통신의 육성이 바람직하다.

변도은 주필 :

먼저 이번 정책방안이 갖는 의미는 개방에 대비, 경쟁체제를 보다 빨리 넓게 도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있다 하겠다. 그러면 이번 방안의 이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

1) PCS의 표준 선택 문제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CDMA방식을 우리의 표준으로 선정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TDMA가 저렴하고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견해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가 계속 CDMA방식에 투자해왔고 국가적인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기에 정책의 일관성과 좀 더 먼 안목으로 국제경쟁력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CDMA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



◀ 지난 7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박관에서 통신개발연구원 주최로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려 각계 인사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됐다.

직하다.

2) 경제력 집중문제와 출연금 문제 ; 통신사업과 관련해서 경제력 집중을 문제삼아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듯하고, 오히려 지금 문제되는 것은 PCS사업자 선정에서 기존의 셀룰러 사업자의 참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출연금문제와 관련해서 선정과정에서 입찰금에 붙이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고 오히려 출연금을 사업에 참여한 부담금 정도로 보고 기술적 문제로 선정하도록 해야겠다.

3) 한국통신의 경쟁력 강화문제, 통신위원회의 기능강화의 문제들은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부가 어떻게 각각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방향설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통신사업 전반의 문제는 정부의 선택, 의지, 결심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겠다.

유재현 사무총장 :

통신사업자 선정의 문제는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라는 전제, 그리고 이 문제는 사업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종 심사는 국민이 한다는 생각 아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 나타난 선정의 방법을 보면 첫째 1차 기술, 2차 출연금으로 결국 최고입찰가로 결정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통신사업과 같이 기술력이 중요한 사업에서 자금력을 최종결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부당하다고 본다. 출연금을 기준으로 선정하

는 방법의 구조적 한계를 생각,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위주로 하는 방안에 관한 부분으로 통신사업분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기술력의 문제이지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선정의 방법은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야한다. 출연금은 경쟁입찰의 형식이 아니라 부담금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낼 수 있도록 사전합의(이 또한 시장 전망, 규모 등등을 기초로 논의하여 가능하다고 본다)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과연 기술력은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 기준, 공정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로써 PCS의 경우 한국통신이 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TDMA방식의 도입이 아니라 CDMA방식을 도입했을 때의 장 단점, TDMA를 도입했을 때의 장 단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CDMA방식에 정책일관성과 함께 앞으로의 국가경쟁력 향상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통신사업분야는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므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충분한 논의하에 결정했으면 한다.

이경태 부원장 :

정보사회 전체 미래의 구도가 우선 그려지고 그 범위 내에서 단기,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외부 환경변화등에 따른 정책들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마

련되고 오늘의 문제들이 다루어졌더라면 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단기적 경쟁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중·장기적 입장에서 경쟁확대 방안등을 논의 했으면 한다.

몇가지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1) 한국통신을 정보통신사업분야의 주도적 사업자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우선 정보통신산업의 특성과 성격을 보아 정부가 특정기업을 주도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꼭 필요가, 효율적인가의 판단부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통신의 조속한 시일내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각 사업의 사업자수의 제한여부는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3) 신규사업자 선정방법은 정보통신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관련분야의 다각화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의 고려, 기업간 협력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선정에서도 전국사업자는 꼭 필요한 곳에 두고 가능한한 지역사업자를 많이 참여시켜 정보사회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있다.

4) 마지막으로 통신위원회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공정경쟁위원회같이 강력한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 등의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성순 교수 :

이번 통신사업경쟁력강화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경쟁체제의 도입은 전면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 자료에선 경쟁체제확립방안과 규제방안들, 즉 경쟁을 도입한 후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은 미흡하다.

이 부분을 한국통신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한국통신의 경쟁력 확보없이 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 기대가 힘들다는 점, 한국통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한국통신의 민영화 필수적이란 점, 그리고 단순히 소유권을 민간에게 돌려주었다고 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경쟁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경쟁체제를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조성될수 있는 시장의 전망을 정밀히 검토, 기업이 그 시장을 예측하고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기준 설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조사의 부재는 출연금의 문제에서 보듯이 객관기준이 없어 각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력 집중의 우려 때문에 대기업의 배제, 경쟁의 다원화를 복수지원 제한, 사업자 선정을 출연금으로 한다는 등의 방안은 대전제인 경쟁 촉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좀 더 결단력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경근 변호사 :

먼저 이 방안이 경쟁환경 조성에 얼마만큼 효율적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겠다.

1) PCS의 경우 기술표준은 CDMA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TDMA가 비용절감, 빠른처리등의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CDMA는 국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고 이제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렀고, 앞으로 외국과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하고 외국에 진입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표준에 관해서는 한국통신의 좀 더 거시적 안목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2)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좀 더 확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출연금의 문제도 이 제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효율적인가를 놓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

3) 전기통신기본법등에 대해 재개정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부의 발빠른 준비를 기대한다. ●